

진정한 의제를 찾기 힘든 대선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지켜야

▶ 8 ~ 9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월가 대표 중에
고르는 미 대선

▶ 7 면

고장 난 자본주의
다른 미래를
건설하기

▶ 12 면

고 김주영 씨를 추모하며
장애인을
죽음으로 모는 사회

▶ 10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3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Left21.com

제92호 | 2012년 11월 5일 ~ 11월 18일 | 값 1,800원

레프트21

단식 농성 중인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



철탑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



11월 9일 파업을 준비하는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연대를 건설하자

이명박 정부 들어, 1퍼센트와 재벌들은 돈을 쓸
어 답았지만 99퍼센트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
으로 가득 차 왔다.

하지만 99퍼센트의 목소리는 이번 대선에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박근혜는 시간이 갈수록
'1퍼센트의 대표'로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헛다리만 짚고 있는 두 야권 후보도 분명한 대안
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의 요구에
도 속시원한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이 위기와 분열로 유의미한 선거적 대
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는 우리를
짜증나게 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에 나서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무려 5만 명이 결집한 총회를 성사
시켰고, 사회보장기관 노조 6개와 가스공사 노조
가 하루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각각 목숨을 건 철탑 농성과 무기
한 단식을 벌이며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비정
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투쟁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모호한
의제들만 떠돌던 대선 정국에서 '정리하고 금지, 비

정규직 철폐, 민영화 중단' 등 99퍼센트의 진정한
목소리와 의제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우파와 자본가들은 애가 탄다. 경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편향된 공약을 받아내겠다는 불
법 투쟁을 엄단하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표를 의식해 생색내기식 복지와 경기 부양을 말
하는 대선 주자들을 믿고 기다려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킬 수 없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이 내놓은 꾀죄죄한 공약조차 휴지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후퇴 징조가 뚜렷해졌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내수·투자 모두 침체에
빠져 들면서 성장률도 제로를 향하고 있다.

최근엔 현대중공업·포스코 등 '한국 간판 기업들
까지 흔들'린다는 소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창사 이래 최초로 '절망퇴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1퍼센트에 맞선 99퍼
센트의 투쟁을 확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이야말로 누가 집권하든 시작
될 구조조정과 고통전가 공격에 맞서 우리의 미래
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관련 기사 3 ~ 6면

국경을 넘은 총파업에 나서는 유럽 노동자들

관련 기사 16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나라 복지정책이 마르크주의적 이상론대로 된다.”

김무성

안철수가 집권하면 공산주의 된다?

“식사와 함께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관례였다.”

전당대회에서 뿌린

돈봉투가 관례라는 박희태

“여성들은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찍어 대통령으로 선출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황우여

“이상은 씨가 원래 평소 현금을 잘 쓰고 집에도 현금을 꽤 오랫동안 모아 두는 분”

청와대, 현금을 장롱에 쌓아 두는 게

이명박 3형제의 특징?

“[이상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려 할 때마다 도망을 다니든지 입원하는 버릇이 있다.”

BBK 공범 김경준

“자세히 따지면 당적 변경 몇 번 안 돼”

이인제,

앞으로도 더할 기세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먹던 라면 맛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철갑에서 먹는 라면 맛은 그것을 능가했다.”

투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현대차 천의봉 동지

“‘내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상당히 꼰통스럽고 구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새누리당 여성 당직자

“신의 계시에서 간첩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 얼굴과 똑같았다.”

한 보수 여성단체 대표가 근거 없이

간첩 신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항일 부대들]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

천일파 백선엽의 뻘뻘한 변명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다음호는 11월 19일)

서울 강남역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인천 주안역 남광장 오후 6:40~7:40

울산 현대차 4공장 주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오전 11:45~12:45

고려대(인암)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격주 화요일(다음호는 11월 20일)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오전 11:50~12:5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오후 12:00~1: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국민대(북악) 복지관 1층 오후 12:00~1:00

한국외대(서울) 인문관 앞 오후 12:00~1: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끌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투자자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50퍼센트, 그리고 일본 다이와증권이 50퍼센트를 투자한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삼성재벌 소유의 기업이다.

 내국인 진료도 1백 퍼센트 가능하다. 전체 의료진의 10퍼센트만 외국인허를 가진 의사를 두면 된다. 사실상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돼 있으니 문제가 없을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광역시만 3곳이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다.

 게다가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며, 전면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까지 이렇게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는 이 정권 말기 영리병원 허용 조처가 삼성재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막판 먹튀로 볼 때에만 겨우 이해가 간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삼성경제연구소가 단독으로 기재부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정책이다.

 2011년 3월, 삼성이 인천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18대 국회 막판까지 법 개정이 집요하게 시도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국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실패하자, 두 발 벗고 나선 것이 사실상 삼성계열인 <중앙일보>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1주일 동안 1면부터 사설까지 기사 도배를 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에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을 바꿨다. 이것이 올해 4월



10월 30일 영리병원 허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복지·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짓이다.

선관위의 <레프트21> 판매 방해

박근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을 감시한다는 핑계로 한국외대, 인천시 주안역에서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인천시 남구 선관위는 10월 8일 주안역 거리 판매에 참가했던 내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나와 <레프트21> 거리 판매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시에 유럽 노동자 투쟁 지지, 박근혜 비판 기사 등을 홍보한 것은 통상적인 신문판매 행위의 일부다. 따라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담은 기성신문들이 곳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팔리는 상황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의 판매를 가로막는 것은 진보언론에 대한 이중잣대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에도 선관위는 내게 여전히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선관위 지도위원

조명진은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때 [거리 판매 참가자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끝났을” 것을 “배려와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식으로 열도당 토않은 얘기를 했다. 당시 내게 신분증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고, 기어이 출석요구를 한 장본인이 말이다.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을 대변하는 진보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는 등 우파 정권 재창출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선관위는 정권의 행동대원이라도 된 양 선거법을 들이밀며,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정부·집권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의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선관위 출석일인 11월 6일(화)에는 언론 표현의 자

20일이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국책연구원 이다)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의료비가 연 1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20퍼센트만 늘어나도 의료비가 연간 3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다.

 이것만이 아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의 지방병원 1백 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도 52개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48개 지자체는 분만실이 없다. 여기서 또 1백 개의 지방병원이 문을 닫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부나 어떤 논자들은 OECD 국가들은 모두 영리병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공립병원 비율이 90퍼센트가 넘는 나라들이다. 미국조차 공립병원이 35퍼센트고 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5퍼센트다. 한국의 공립병원은 7퍼센트다. 93퍼센트의 사립병원이 이미 대도시에만 모여 지극히 상업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일 뿐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 민영화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가스와 철도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KS마크까지도 민영화하려 한다. 그 결과는 의료비와 가스요금·철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복지 공약 이전에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이명박 정권이 막판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복지공약은 거짓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임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정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아야만 하는가.

 10월 31일 사회보험과 가스노동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정권 막판 ‘막장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벌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15만 볼트 철탑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만 바라보고 기다리다간 그전에 나라가 결판날 지경이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호봉제 폐지 임단협 승례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을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 파업 집회
일시: 11월 9일
장소: 각 시도 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학대회의

2012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일시: 11월 10(월) 오후 7시
장소: 대한문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사전 결의대회

일시: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대한문
주최: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태일 정신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11월 11(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전태일다리 - 시가행진 - 서울역광장
주최: 민주노총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

일시: 11월 17일 시간미정



최병승·천의봉을 우리 품으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연대를 확대해서 '올해는 반드시 끝장내자'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목숨을 건 송전철탑 농성이 투쟁의 불씨를 살리며 저항을 점화했다.

지지와 연대도 쏟아지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현대차·쌍용차 투쟁 지원이 긴급 결의됐다. 대선 주자들도 연이어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를 표했다.

지배자들의 분열도 감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 이채필조차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몽구 일당과 경찰이 합작해 공장 안에서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체포했지만, 하루 만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통쾌한 일도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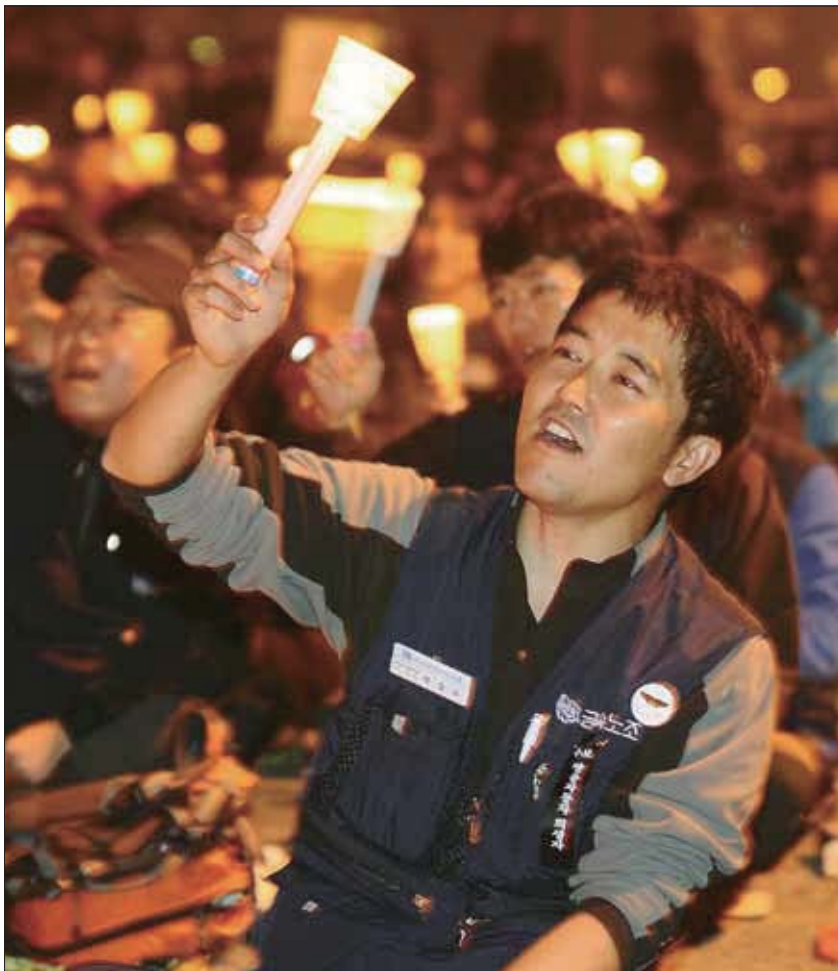
그러나 현대차 정몽구 일당은 여전히 꼼수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파견 회피 꼼수 “신규채용”

현대차 사측은 “2015년까지 단계적 3천 명 신규채용안”으로 불법파견을 무마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규모도 터무니없고, 근속연수도 인정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무엇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계획이라서 비정규직지회는 이 “쓰레기 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사측은 당장 사내하청 4백 2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려 한다. 사측은 이를 통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분열도 꾀하려는 듯하다.

사측은 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자연 감소 인력 부족분 충원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농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러운 사측은 그동안 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고 비정규직으로 빈자리를 채웠다. 게다가 이번 신규채용은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것일 뿐이다. 그 사내하청 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단기 직영 계약직으로 채울 것이다.



10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이미 시작된 광범한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모호한 태도를 넘어서서 사측의 꼼수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고임금? 사익 챙기기?

현대차 사측이 특하면 꺼내들던 ‘고임금의 배부른 노동귀족’이라는 위선적 레파토리를 비정규직 투쟁에까지 들이대기 시작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다.

사측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4.2년차, 2백23시간 근무, 10+10 특근 2회 기준)의 임금은 기존 4천5백69만 원에서 5천4백38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비난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가 반박했듯이 사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2008년 2월에 입사한 한 조합원의 경우, 2012년 시급 4천5백80원(최저 시급임)으로 월 3백25시간을 근무해야 성과금을 합쳐 연봉 3천만 원”이다.

“최저시급으로 공장에서 죽도록 일해야 3천만 원이 될까 말까인데, 연봉 5천4백38만 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때도”다. 백 보 양보해 설사 연봉이 5천만 원이라 치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차별과 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동일 근속 정규직의 65퍼센트(비정규직

지회 추산) 수준인데,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정몽구 일당은 지난해 8조 1천억원의 순이익을 챙겨 놓고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최병승 동지가 13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한 것을 두고 “사익 챙기기”라고 비난한다. 대법원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따라 그동안 차별 때문에 떼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사익 챙기기”인가? “사익 챙기기”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다 구속됐던 정몽구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다.

최병승 동지가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승리해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 통받았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 진정한 “사익 집단” 정몽구 일당에 일침을 놓을 수 있다. 뻔뻔한 정몽구 일당은 이데올로기 공격뿐 아니라 징계 협박도 시작했다. 이런 시도도 좌절시키려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연대

온갖 음해와 공격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지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10년 가까이 끈질기게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낳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자신이 비정규직이거나 미래에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광범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에 대한 분노도 이 투쟁이 대변하고 있다.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반란인 셈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이 투쟁이 주요한 이슈를 형성한 지금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이미 시작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2011년 한진 희망버스나 쌍용차 투쟁처럼 광범한 세

력들을 끌어 모아 정치적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물심양면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비정규직 3지회가 호소하고 있는 11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에 더 큰 지지 대열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버스 때와 달리 이 투쟁은 작업장 투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철탑에서 농성하는 최병승 동지는 고공 농성이 “예고편”이라면 현장에서의 생산 타격 투쟁이야말로 “본편”이라고 했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3지회도 현장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광범한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작업장에서 투쟁을 벌이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둘째, 현대차 정규직지부의 연대도 중요하다. 현대차 사측의 이간질을 격파하고,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모든 대체 인력 투입 저지를 실행하면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정몽구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박현제 지회장이 체포됐을 때 정규직지부가 두 시간 잔업거부를 한 것은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런 연대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 투쟁이 단지 비정규직이나 현대차만의 투쟁이 아니므로, 급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발의로 상정돼 통과된 현대차 투쟁 지원 안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다양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선 두 동지의 호소에 응답하자. 10년을 싸워 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올해는 반드시 끝장내게 연대해 달라’는 호소에 응답하자.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엄길정 현대차지부 1공장 대의원 대표

“정규직 활동가들이 나서야 합니다”

두 동지의 고공 농성이 전주·아산·울산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충분한 불씨가 될 것이에요. 비정규직 동지들과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길 했어요. “동지들이 투쟁하면, 정규직도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을 거다. 그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화답할 거다.”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현장 정서 [가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조

직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가 열렬해요. 선배 조합원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규직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활동가, 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정규직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야시켜야죠. 그렇게 연대를 조직하

는 게 활동가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도 1공장에서, 반별·부서별로 들어가 조희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젊은 동지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지 알고 연대를 조직할 생각이예요. 1공장엔 건강한 동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파업을 하면, 정규직도 공동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원하청이 함께 투쟁합시다”

8월부터 계속 투쟁해 왔고, 그런 와중에 조금 희망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다시 현장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이제 철탑 농성장 사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현장 파업을 해

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열을 추스러서 파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 동지들이 좀더 이 문제를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전에 미진했던 부분

을 극복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가 아니라 자기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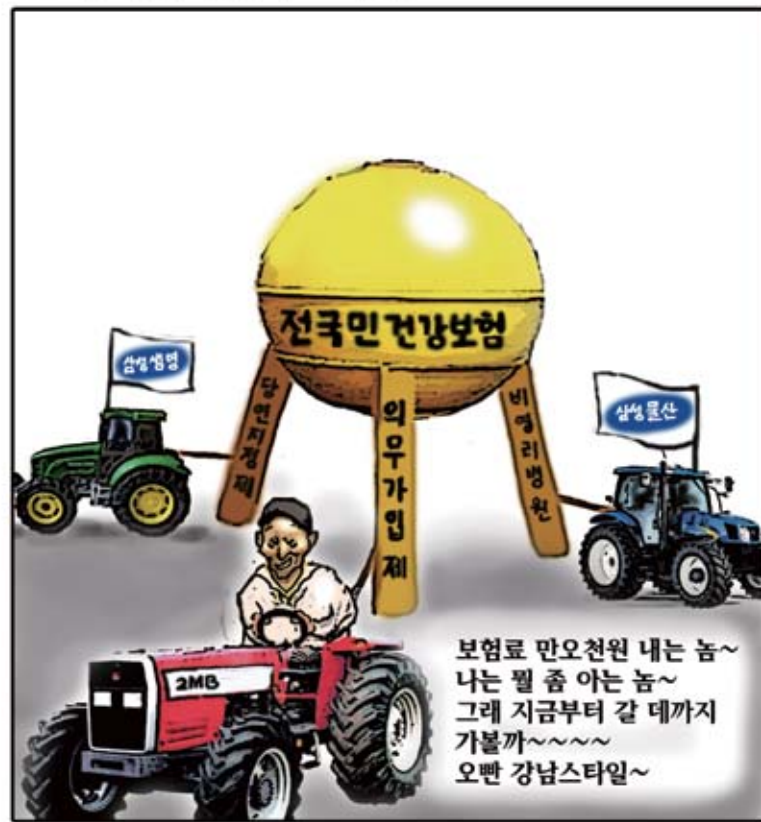
인터뷰·정리 박설



폴라주 86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MB의 막장 민영화 스타일



보험료 만오천원 내는 놈~
나는 뭘 줄 아는 놈~
그래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
오빠 강남스타일~

illusion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하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10년을 견뎌낸 설움과 눈물, 피와 땀을 되돌려 받기 위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작업복, 다른 출입증, 다른 월급 명세서. 차별과 설움, 탄압에 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돼 간다. 10년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정의의 위해

현대차 정몽구 일당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수배 탄압에 시달렸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따라서 이 투쟁이 승리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1퍼센트에 맞서 99퍼센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몽구는 비정규직의 피와 땀을 쥐어짜 지난해 순수익 8조 1천억 원을 거뒀다.

이 순수익의 9.6퍼센트만 투자하면 모든 사내하청 1만 3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몽구의 수백 평짜리 한남동 고급주택과 찬바람 속에 겨우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장은 1퍼센트와 99퍼센트의 대조적 삶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9백만 비정규직의 미래를 위해

1998년 IMF 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자본가들은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정규직보다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차별과 설움, 불안정에 고통받는 한국의 9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현대차 투쟁이 승리한다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지배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 분열 지배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교해 “노동귀족”이라 공격하고, 비정규직이 투쟁에 나서면 정규직이 위험해진다고 이간질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나서면 지배자들의 무기를 녹슬게 만들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된다. 경기가 후퇴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시작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한진중공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해고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은 민주노조를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무기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승리해야 한다.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삼포 세대”,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88만 원 세대”. 청년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승리가 청년들의 미래와 연관돼 있는 까닭이다.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의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유신 독재 퍼스트레이디 박근혜, 비정규직 확대법을 도입했던 민주당의 계승자 문재인, 성공한 CEO 안철수가 두루뭉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말해 왔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계급의 진정한 관심사와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의 미래를 위해

유로존 위기와 중국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우울한 경제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내년에 노동자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한다면 이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에 다짐들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

최병승 동지는 철탑에서 이 투쟁이 “골리앗에 맞선 투쟁”이라고 했다. 저들이 골리앗인 이유는 우리가 무릎 꿇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난다면 저들은 더는 거인도, 골리앗도 아니다.

연대에 나서자. 진보정치의 분열로 주춤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합시다

- 11월 17일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에 적극 참가합시다.
- 비정규직지회 모금 호소에 동참합시다.
후원 계좌 : (농협) 356-0706-1138-63(용석록)
- 자신이 속한 학생회, 노동조합, 단체 등에 제안해 투쟁 지지 성명을 발표합시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웹사이트에 지지 글을 올리고, 지지 물품 등을 보냅니다.

웹사이트 : hjbtcw.jinbo.net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전화번호 : 052-280-8501

· 철탑 농성 중인 두 동지에게 응원과 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최병승 : 010-4108-3010 천의봉 : 010-8660-8583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지지와 연대의 글을 올립니다.

▶ 관련기사 14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연대 소식)

“이 싸움은 우리에게 터널 너머의 빛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경험을 적어 보내 왔다. 이 청년은 친구들에게 후원을 호소해 단 이틀 만에 23만 원을 모았고, 10월 26일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에게 이 돈을 직접 전달했다.

울산공장 포위의 날 집회가 있기 이틀 전 박현제 지회장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더운 여름 내내 공장에서 싸우고 있었을 조합원들이 떠올랐고, 미조직 청년들인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 채팅방에 후원을 제안하는 문자를 띄워 놓고 혹시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던 중, 친구들의 반응에 나

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쿨”, “나도 쿨”, “나도!” 즉각 흔쾌한 동의들이 쏟아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좌” 단 두 글자를 답장으로 보낸 친구도 있었다.

우리 중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지만 학교 다니는 내내 알바를 안 한 적이 없는 대학생도 있었고, 한치 앞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있었고, 학자금 빚을 짊어지고선 일터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도 꾸역꾸역 견뎌야만 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상황에도 모두가 매일같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모금에 흔쾌히 응한 취업준비생 친구들을 비롯해, 정규직 친구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후원금을 보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한 친구는 자기

하루 일당을 훌쩍 뛰어넘는 후원금을 내면서 ‘이번 달 여윌돈이 남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리 중 가장 어린 대학생 친구는 ‘그동안 언니, 오빠들이 밥 사 주신 것 여기에 갚을게요’ 하며 약간의 무리(?)를 했고, 후원 제안을 받자마자 뱅크 입금부터 한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 뭇까지 후원금을 전해 왔다. 어떤 친구는 이 기회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며 장기투쟁 작업장들을 좀 알려 달라고 했다.

오아시스

연대 메시지를 써 줄 것을 제안했을 때 준비했다는 듯 유머와 패기 넘치는 응원 한마디를 날려 준 친구들도 있었지만, 연대 메시지를 처음 써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색함에 머뭇거렸다. 그러나 나는 기다려야 했다. 친구들은 첫 번째 밤에도 두 번째 밤에도 내일까지 좀 기다려 달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 말이나 쓰고 싶지 않다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고, 울컥한 가슴에 전하고 싶은 애기가 아주 많았던 것이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 그 비싼 등록금 내가며 번듯한 대학 졸업하고 토익도 따고 그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성인이 다 돼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하기는커녕 창피하게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덜 얻어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돼 버리고 말았다. 나 역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며, 계약직 두 번을 돌고 나니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이면 서류 심사에서부터 잘리는 그런 나이가 돼 버렸다.

한 후배는 얼마 전 내게 무덤덤하게 말했다. “언니, 긴 터널 지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비유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난

터널이 아니라 그냥 무덤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긋지긋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땅 파기를 멈추고 화를 내며 마침내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터널 너머의 빛이자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야말로 수많은 청년들을 ‘일단 살고 보자’며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 왔으며,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싸우는 노동자들’이라는 현실이 지금껏 수많은 이들을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려왔고, 앞으로 또한 그러하리라. 많은 이들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이니, 지지하는 청년들 ‘뻥’ 믿고 현대차 노동자들도 마음껏 싸워 이겨내기를. 나도 빨리 그 싸움 함께하고 싶다.

최진영

쌍용차 모든 해고자 복직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24번째 죽음을 막기 위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한 달 가까이 됐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가슴이 벅차”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을 해 온 투사인 김정우 지부장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는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는 10만 부 넘게 팔렸고, 종교계에서도 모금과 연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백 98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쌍용차해고자 복직 촉구 여성계 동조단식’을 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것을 믿고 또 희망한다”며 연대를 보냈고, 해외 학자 75명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 2백26명이 쌍용차 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투쟁 확대

이런 높아지는 사회적·정치적 압력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마저 국정조사 수용을 흘릴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 모두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대중적 항의를 조직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급자·해고자 복직이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쌍용차 특별보고서’도 쌍용차 비극의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 줬다. 회계조작·벽투·살인진압도 모자라 총 4백3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과 가진 면담에서 중재안 비슷한 요구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투쟁을 호소해야 할 진보 의원이 투쟁 주체인 쌍용차지부와 협의도 없이 ‘단계별(선별) 복직’을 암시한 것은 부적절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단식 중인 김정우 지부장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에 연대를 호소하고, 현대차의 최병승·천의봉 조합원이 쌍용차 ‘3천 인 동조단식’에 참가하며 연대를 호소했듯이 말이다.

최병승 조합원의 호소처럼 “공간은 다르지만, 노동자 착취에만 눈이 먼 자본”에 맞서 “우리는 함께 투쟁할 수 있고,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외침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10월 3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런 연대 투쟁을 적극 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3천 인 동조 단식’ 집회에 당원 1천 명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바로 앞에 둔 11월 24일 쌍용차 4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대를 확대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내자!

유병규



11월 24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최대한 모여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올해 2월 평택에서 열린 쌍용차 공장 3차 포위의 날 행진 모습.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이것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이 글은 단식 중인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 송전탑에서 고공 농성하고 있는 최병승·천의봉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를 축약한 것이다.

곡기 끊고 철탑 오르고 ... 참 미련한 나와 당신들.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정리해고로 23명이 죽어 곡기를 끊어도, 대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며 15만 볼트의 송전탑에 올라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대통령 선거 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복직, 경제민주화를 통

해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난 십사리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지나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재벌들 눈치 안 보고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소리가 귓등에도 안 들어옵니다.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고, 비정규직은 9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겠다는 구체적 계획 없이 무슨 복직고, 또 무슨 경제민주화입니까?

선거철임에도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 근처에 와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겠다고 곡기를 끊은 지 14일째입니다. 희망 한 움큼 보지 못한 채 골방에서 죽어간 내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에 백한게 이 미련한 방법입니다.

지난 4년간 더는 죽이지 말라고 이런 저런 투쟁해 봤는데 궁리를 해 봐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미련을 부려

봅니다. 동지들도 방법이 없어 그 차디찬 철탑 위에 오를 것이겠지요?

하지만 난 이렇게 미련을 부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산화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 준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견디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절규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들지만 견디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해고라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물려주지 말자는 단단한 마음으로 견디어 봅시다.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

정부가 끝내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뒀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을 고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이명박은 고작 4개월 임기를 남긴 레임덕 처지에서도,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배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좀 더 쉽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닦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며 시장화의 길을 놓은 덕에, 정권을 넘겨받은 이명박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KTX 민영화를 시도할 수 있었듯 말이다.

그래서 일단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곰수’만으로 민영화의 썰기를 박아놓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이명박이 임기 내에 이 시행령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가스 노동자 2천여 명은 고무적이게도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가스 민영화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으나,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공동 투쟁으로 저지된 바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분할 매각이 실패하자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소비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직도입’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 GS칼텍스, SK E&S와 같은 대기업들이 천연가스 사업에 뛰어들게 했다.

이 기업들은 한전발전 자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요금은 인하하지 않았다. 이들은 천연가스 직수입 가격이 높을 땐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추가 비용 1천 1백79억 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패해를 더 확대하려 한다. 직수입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민간 사업자, 사실상 대기업들의 천연가스 시장 진출 활로를 열어주려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은커녕, 오히려 이윤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이미 SK와 GS가 판매하는 소매 도시가스의 비중은 34퍼센트나 된다. 이 기

업들이 산업용 가스마저 공급하게 되면, 가스 산업은 거의 민영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진다.

노조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낮고 산업용 수요 이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선 최대 4백60퍼센트의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영국·미국·캐나다에서도 민영화와 경쟁 도입 이후 요금이 폭등했다.

요금 폭등

그런데도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계속할 태세다. 정부는 10월 31일에도 인천공항,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철도, 의료, 가스, 공항, 대학 등 공공부문에서 민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 등으로 광범한 민영화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영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걸린 각 분야의 지배자들 내 갈등도 이 정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최근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도 비판에 직면했고, 불과 얼마 전에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의 역·기지 회수 계획은 관료들과 정치권 내 이견에 부딪혀 유보됐다. 철도 사측은 최근 입단협에서도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부분적인 양보를 해야 했다. 현대차, 쌍용차 등 곳곳에서 투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 군데라도 봉합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주문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선 국면을 활용해 싸워 불만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싸워보지도 않고 협상을 마무리한 노조 지도부의 태도에도 아쉬움은 있다.

현재 지배자들 사이에선 공공 부문에 시장과 경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 민영화의 방식과 시기, 주도권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지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경쟁강화, 공공요금 인상,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적 고통전가의 필요성은 모두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관료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박근혜도 민영화 정책에는 찬성한다. 문재인은 노동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지만, 민영화 중단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 이은 역대 정권들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해서도 우회적 방식으로 꾸준히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가 내년 긴축 예산을 확정할 것을 보면, 새정부가 누가 되든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공사 노조의 파업 출정식에서 최준식 지부장이 말한 것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SK·GS가 있는 한, 민영화를 찬양하는 재경부가 있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10월 31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하루 파업 등을 하며 민영화 철회,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반갑다. 지금 철도·가스·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과 사회단체들 내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구축해 나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과 2008년에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민영화를 막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것처럼, 정부가 각개 격파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위기에 빠진 정부가 감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대중운동을 건설해 나가자.

이정원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세 노조(전국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11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 당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린다. 1년마다 ‘계약 갱신이 될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방학 동안엔 실업 상태가 돼야 한다. 학비 노동자의 88.6퍼센트가 근골격계 증상을 앓고 10명 중 3명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도 참아야만 한다.

학비 노동자들은 1년이나 20년 경력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무기계약이라도 해고가 자행되고,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병가·직무연수·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학비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

파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진정한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세력은 누구인가?

장애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우파와 지배자 들의 공격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운운하며 파업 실태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충북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과 선전·선동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진정한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세력은 누구인가?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에 돈벌이와 경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차별을 들여 놓은 정부와 지배자들 아닌

가? 오히려 이들이 부추긴 임시경쟁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끊임없이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차별과 소외를 없애려는 학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이기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우익과 지배자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위선과 파렴치한 공격에 맞서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학비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전교조 교사와 연대 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기성 언론의 비난에 맞서며 지지 현수막 걸기, 리본 달기, 홍보전 등을 벌일 필요가 있다. 알람장이나 팬지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비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학교 관리자들의 방해에 함께 맞서줘야 한다.

박성환

“차별 해소가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

“얼마 전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우개선안’을 발표해 12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노동부 방침보다 2년이나 늦는 뒷북치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건비의 70퍼센트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이어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교육청은 30퍼센트를 해고해야 할 판이죠.

심지어 ‘2013년 교과부 예산안’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0원이에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지도 없는 것이죠.

더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과부에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지도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 이에요. 현장은 이미 차고 넘쳐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비정규직 차별을 보고 자랐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비정규직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강요당했지요. 이에 맞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 줄 것이에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비정규직이 해 주는 밥을 먹일 순 없습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교육공무직의 핵심은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시행입니다. 지금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차별이 커집니다.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정규직의 4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하루 빨리 호봉제를 시행해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죠.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쓴 배너를 걸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새누리당은 학교 비정규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은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만 믿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그동안 대국민 홍보전, 학부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우리의 파업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보수언론이 우리를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해 주는 밥을 먹일 수는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노동 3권이 보장된 노동자는 학교 비정규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을 대표해서 파업한다고 생각하고 더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연대해 주십시오. 현장의 분위기는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낌없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일용 잡금직’으로 일하던 당시 우리의 소원은 일년마다 계약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요구가 거세지자, 2년 이상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무기계약직이어도 임금은 제자리예요. 1년이든 20년이든 임금이 늘 똑같죠. 우리의 요구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투쟁이 이제 붓물터지듯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지

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여성이 일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려면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비정규직 운동이 쉽지만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가 실업과 취업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끈기와 애정이 꼭 필요하죠.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정규직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과제로 안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10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공동대표(좌측부터 황영미, 박금자, 이태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아말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하라

지난 10월 15일 교과부는 내년에 1년 단위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2천3백 명 더 뽑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영전강 확대 정책은 정규직 교사 대신 비정규직 교사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알팍한 계획의 일환이다.

교과부는 또한 영전강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을 최장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영전강의 ‘신분 안정화’ 운운하지만, 1년 단위 임용 조건을 손볼 생각은 없다.

MB 정권의 ‘실용 영어교육’ 강화로 2009년부터 영전강 제도가 졸속 시행된 뒤 학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다. 학생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 수업 시수를 늘려 사교육 광풍이 일었고,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영어 수업이 배치되는 등 교육 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인 영전강 사이에 미묘한 갈등도 생겼다. 정규직 교사들에게 담임과 행정, 영전강 관리 업무가 편중되자 정규직의 불만이

증가하는 한편, 영전강은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양산해 온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

기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정규직화하고, 이후 교사로서의 소양을 위한 충분한 훈련과 연수의 기회(그리고 의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레프트21> 웹사이트의 별도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조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남부지구
현대차 송전탑 공공농성,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듣는 투쟁과 과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연사 :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양희삼 (현대차이산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일시 : 11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 (교대역 1번/13번 출구 2백 미터 농부의 아들 2층)
참가비 : 일반 4천 원/학생 3천 원 (장소대여료)
문의 : 010-9401-1370

경기[지회]
2012 대선과 진보진영의 과제
연사 :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출구 도보10분,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5층)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8700-4647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월가의 대변자들 중에서 고르라는 미국 대선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워킹 푸어'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한다.

미국 대선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큰 논란을 낳은 대법원 판결로 플로리다 주의 표를 얻은 덕분에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했던 2000년 선거 때처럼 말이다.

글을 쓰는 지금[10월 29일] 공화당 후보 밋 롬니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버락 오바마를 49퍼센트 대 48퍼센트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경합주 아홉 곳에서는 아직 오바마가 살짝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후보들이 “군(郡, county)마다 돌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고 묘사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일반 국민투표를 통해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에 당선하려면 선거인단 중 최소 2백70표를 확보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주에 유리하도록 선거인단이 배분돼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경합이 치열한 상황이라, 오바마가 전체 투표에서 더 적게 득표해도 선거인단 표에서 롬니를 이길 수 있다. 부시가 2000년에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월가 '점거하라' 시위대 이 사람들을 오바마와 롬니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듯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모두 ... 초선 때보다 재선 때 득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그렇게 득표한 덕에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큰소리칠 수 있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이기지 못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승리하는 것은 대통령 오바마의 통치력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다.”

하원 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을 사기당했다며 격분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에 맞서야 할 테니, 오바마는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이 될 것이다.

4년 전에 그토록 많은 환희 속에서 승리한 오바마가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흔한 대답은 미국 경제가 2008~2009년의 대불황에서 회복하

테크노크라트
전문지식이나 능력으로 사회 통제·운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사람

워킹 푸어
직업이 있지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

는 것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가 그의 훌륭한 블로그에 썼듯이, “미국 기업 이익은 이전 최고치를 뛰어넘었지만, 기업의 이윤율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미국 자본주의는 아직 이전의 비생산적 자본과 부채에 짓눌려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최신 통계를 보면, 2012년 삼사분기에 기업 투자가 실제로 줄었다.

오바마는 이런 암울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09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오바마는 2007년 가을 금융 위기로 거의 붕괴한 월스트리트 주도 경제·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맷 스톨러는 오바마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보수적 테크노크라트다. 자기 자신 같은 보수적 테크노크라트들이 복잡한 국가 기구를 운영하도록 보장해 주고, 그들이 사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그 정책의 결과는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불평등이다.”

스톨러는 “부시 정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서,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65센트가 최상위 1퍼센트에 돌아갔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수치가 93센트까지 올라갔다” 하고 지적했다.

이래서 공화당은 불황이 유발한 분노를 이용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사모펀드 사장 출신 롬니의 도전에 직면해, 오바마는 연사를 살짝 좌경화했다.

그러나 첫 대선 TV 토론에서 오바마가 보여 준 부진한 성과는 2008년에 오바마에게 열광했던 지지 기반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분명히 보여 줬다. 롬니는 약삭빠르게도 이후 토론에서 국내·대외 정책 모두에서 중도로 옮겨 갔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쓰기 어려워졌다. ‘오바마를 찍지 않으면 미국은 암흑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카드 말이다. 진실은 이 선거가 월가와 미 제국을 옹호하는 두 대변자 사이의 경합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추적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는 이번 선거에 약 58억 달러(63조 4천억 원)가 쓰일 것으로 추산한다. 대통령 선거 정책은 기업의 부자들하고 경매가를 부를 수 있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들은 11월 6일 대선에서 점점 늘어나는 미국 ‘워킹 푸어’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워킹 푸어’의 처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7호 / 번역 김인수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NLL 포기는 서울을 다 내주고 또 부산까지 더 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설치던 새누리당의 북풍몰이가 별로 ‘악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캠프 내에서도 “공세는 안 먹히고 피로감만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통찰했던 고(故) 리영희 교수는 이미 1999년에 발표한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에서 남한 정부와 우파를 향해 철두철미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리영희 교수는 “북쪽으로 이 이상 못 간다”는 뜻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NLL(북방한계선)은 “남한 정부와 군부의 북한 공격 군사 도발 행위를 예방·저지할 (미국의) 긴급한 필요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 협상을 끈질기게 반대하며 두만강-압록강 선까지 확전을 고집했던 이승만은 당시 미국 정부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줬다. 미국은 굶주린 사냥개처럼 날뛰는 한국 정부와 군부의 목줄을 단단히 조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해군을 통제하기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에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는, 남·북 쌍방이 인정한 군사분계선은 더더욱 아닌 NLL의 실체다.

리영희 교수는 현재 한반도 서해 해역 공간의 실질 군사분계선은 치열한 논란 끝에 결정되지 못해 오늘날까지 합법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 양국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군부대를 방문한 박근혜 이런 세력이 설칠수록 노동자·민중의 '안위와 안전'이 위협해진다.

(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래 미사일방어(MD)를 양국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30일 국방부가 그동안 기밀로 취급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요격 개념도를 발표하고 향후 MD 체계의 핵심 요격 미사일인 PAC-3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즉, 합법적 분계선도 아닌 NLL을 “수호하겠다”며 한미동맹과 호전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MD 동참까지 나아가려는 남한과 미국 지배자들의 속

셈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NLL 대담 못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국가의 안위와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위선을 떨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전쟁 불사’를 외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평범한 노동자 민중의 ‘안위와 안전’과는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다.

위험한 시도들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문재인과 “NLL은 우리의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안철수도 한심하다.

한편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NLL은 내가 집권한다고 해도 실효

적 지배가 유지될 선”이라고 답한 것도 “99퍼센트를 대변하겠다”는 진보 후보로서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우파들의 군사안보 논리에 타협하면서 어떻게 99퍼센트가 겪는 전쟁의 불안을 막아낼 것인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 후보처럼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하며 정면 대결하는 게 맞다.

그동안 남한의 지배자들은 NLL 논란과 북한위협론을 발판 삼아 군사적 불안정을 부추겨 왔고 중미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그 시도는 더한층 위험천만해지고 있다.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중단시키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제국주의적 조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다.

김승주

이제는 ‘이적 편지’까지? 윤기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윤기진 민주진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권연대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전쟁훈련 실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왔고, 윤기진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3년 수감 생활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윤기진 씨가 수감 시절 지인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어] ...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결했다.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도 찬양고무죄라는 것이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 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쓴 글”이란 점을 문제 삼고는 이 편지를 인터넷에 올린 활동가에게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북한 찬양 혐의는 명분일 뿐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조직을 탄압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체된 지지율에 불안을 느껴 온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최근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것만으로 김정은 진보신당 활동가를 압수수색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진진보연대, 주권방송 등 진보단체들도 압수수색했다.

“종북 좌파” 마녀사냥을 이용해 진보진영 전체를 경직시키려는 이런 시도에 맞서 진보진영이 정견의 차이를 떠나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김지윤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훑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기성 언론들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당과 후보들의 헛 공약과 말잔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진정한 쟁점과 의제를 가린다.

〈레프트21〉은 이런 형식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적 쟁점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운동으로 표현된 진보적 요구들을 기준으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이것을 보면 초겨울 날씨에 15만 불드 철만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

차 노동자의 목소리로, 폐논물을 흘리며 2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의 목소리로 주류 후보의 공약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박근혜가 모든 점에서 가장 반노동·반민주적이다.

학교부동한 '1퍼센트의 대표' 박근혜는 오히려 파견 노동자를 고착시키는 하도급 법을 만들겠다고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처럼 막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에게

문재인이 내놓은 답은 고작 "정리해고 요건 강화"다. 안철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두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세후보 모두 '부유세'에 반대한다.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말해도 이런 식으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질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에서는 거

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두 NLL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몇 가지 조건을 달더라도) 지지한다. 어쨌거나 없게도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낮았고 비판하고 있다.

NLL

박근혜·문재인·안철수는 기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공부

문 민영화도 문재인은 중단이 아니라 '전면재검토'라며 회피하고, 안철수는 "그래 그때 달라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밝히지 않고 있다.

종합하자면 박근혜는 여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지만 알맹이가 없고, 안철수는 그 중간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럴듯한 말을 많이 꺼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자대통령후보' 김소연 등이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요구들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다만 진보정의의 일부에서 '보편적 중세'(사실상 노동자 증세)를 제기하거나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기성 정당·언론의 압력에 타협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보정의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요구 수준을 낮추지 말고, 그것을 실현시킬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장호중



반역사적인 '1퍼센트의 대표' 박근혜는 결단코 막아야겠지만, 문재인·안철수도 입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왜 투표시간 연장에 결사반대하는가

대세론에 급이 갠 뒤 좌중우돌하던 박근혜가 이제 우파 결집으로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논쟁을 내며 야권을 "총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김광진이 백선엽을 '민중 반역자'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서 항일투쟁부대를 때려 잡는 일본 군인이었던 자를 옹호하며 자신의 뿌리를 드러낸 것이다. 급기가 남아 빠진 우익인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1백 퍼센트 국민대통합'은 '1백 퍼센트 보수대통합'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발맞추려는 건지 '레임덕' 이명박도 5년을 끌어 온 영연방빈 도입 조치를 강행 처리했다. 내곡동 특검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저지른 온갖 범죄 행태와 악행 때문에 당장 구속수사 받아도 모자란 자가 죄목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는 우파 결집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그런데 투표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지지를] 확장성의 한계"를 절감하는 듯하다.

〈내일신문〉의 10월 초 설문조사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 1위로 박근혜를 지목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세대에서는 30~40대,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거부 응답은 상대 후보들보다 두세 배나 높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집토끼라도 단단히 단속하는 게 남은 장사라는 계산을 한 듯하다. 박근혜 반대층의 투표율이 낮거나 분열하면 견고한 우파 지지층 결집으로도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이런 책략이 민주당의 무능 속에서 효과를

박근혜 대세론은 잘 먹히지 않는데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 전반은 위기감이 커져가는 듯하다.

거든 바 있다.

박근혜가 '투표 시간 연장'에 그토록 결사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의 후계자로서 국민투표 자체가 "남비"로 여겨지기도 할 터다.

진흙탕

NLL에 이어서 우파는 '성장' 프레임도 꺼내두고 있다. '무상복지'를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구호로 몰아가 해 놓은 것도 상에 차지 않던 우파들이 이제 '안보'와 '성장' 프레임으로 이데올로기 지형을 더 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박근혜는 31일 한 강연회에서 "무상보육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옳지 않으며 경제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달라진 강조점을 선보였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막상 내놓은 경기부양 방안에는 복지 예산이 절반이나 된다. 혼돈 그 자체인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평소 '우파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선

진당과의 통합도 결국 반발과 이탈이 심해져 우파 결집이 인제 하나 건진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이처럼 박근혜와 집권당은 우파 본색으로 돌진하면서도 혼란과 있다. 이는 이들의 의도된 처치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집권당 위기를 벗어나려는 우파 결집에는 적격자였지만, 애초 문제의 뿌리인 우파 정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데는 적격이 아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10월 들어 포스코가 본적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대세론은 잘 먹히지 않는데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 전반은 위기감이 커져가는 듯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집권 우파가 '안보(총복)와 성장'(복지 거부) 프레임에 꺼내두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단도리하려는 까닭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역시 문제다. 이 둘이 우파 프레임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박근혜가 모순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말한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안철수가 먼저 내놓은 '투바퀴'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옳지 않으며 경제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달라진 강조점을 선보였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막상 내놓은 경기부양 방안에는 복지 예산이 절반이나 된다. 혼돈 그 자체인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평소 '우파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선

김문성

문재인·안철수는 왜 헛다리를 짚는가

박근혜의 좌중우돌과 위기가 계속되는데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힘을 합쳐야 겨우 박근혜 지지율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문재인과 안철수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나 하며 개혁을 바라는 대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갑자기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최근 단일화의 고리로 제기한 '정치혁신'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지난해 2030 세대 여론조사에서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크다.

1퍼센트 부자만을 대변하며 자기 이익만 챙긴 새누리당이 이런 정치 환물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개혁을 바란 사람들에게 쓰디 쓴 배신감을 안겨 준 민주통합당도 이에 한몫 했다.

이런 정세에 다가가려 안철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혁신안을 냈다. 그러나 "없앨 것은 중앙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며, 줄일 것은 의원 수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석 1백 석"이라는 이정희 통

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말처럼 이것은 헛다리 짚기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랬더니 염소 목에 달았다"고 고집졌다.

문재인이 내놓은 방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비례대표를 1백 석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이 요구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요즘 제기되는 '개헌'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고,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99퍼센트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될 거라고 기대할 근거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세비 20퍼센트 인상이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비정규직이 철말에 올라가는 동안 새누리당은 문제 해결은 커녕 전체를 정체를 발고인 민주당은 피죄죄하게 타협해 왔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보수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정치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주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시위와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이 허용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서만 권력자들에게 양보를 얻어 내고 노동자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힘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적 대안도 발전



(위부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자대통령후보' 김소연

시킬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이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결선 투표제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의 정치혁신안에서 이런 알맹이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안철수가 박근혜 뒤를 쫓아간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안철수는 재벌의 집권된 소유권을 분산하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방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명이 지배하던 기업을 10명이 쪼갬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하지 않는 KT와 같은 기업도, 중소기업들도 비

	진보 정당과 후보들의 요구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기간제 사용자 제한	○	○	○	×
파견법 폐지	○	×	×	×
노동시간 단축	연간 1천8백 시간	2017년까지 2천 시간	목표 없음	2020년까지 1천8백 시간
공공 일자리 대폭 확충	○	일부 수용	×	×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교사, 공무원)	○	일부 수용	×	×
정리해고 금지	○	×	×	×
부유세	○	×	×	×
보편적 복지	○	○	×	×
무상의료	○	일부 수용	일부 수용	×
반값등록금	○	일부 수용	일부 수용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40%	30%	매년 50개
임시 폐지 대학평준화	○	일부 수용	×	×
국방비 감축	○	×	×	×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	×	×	×
NLL 사수론 반대	○	×	×	×
파병 중단	○	×	○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재국유화	○	○	일부 반대	×
핵발전	즉각 완전 중단	신설한 중단	신설한 중단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	○	○	×
FTA 폐기	○	×	×	×
이주노동자 노동자기제	○	○	○	○

출처: 진보정의당, '노동자대통령후보' 김소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보정치의 독자성

미국식 양당정치는 왜 재앙인가

진보정당의 위기와 분열 속에서 독자적 진보정치를 강조하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는 미국의 '뉴딜연합'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편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고, 항구적인 다수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진보 대연합'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에 당선해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러한 계급연합과 독자적 진보정치의 실종이 미국 진보의 역사에 남은 재앙적인 결과를 의미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무렵 미국 노동운동은 침체에 빠져 있었다. 당시는 1910년대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좌절되고, 러시아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거세게 일어난 파업이 패배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이때 대공황이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미국 남성의 3분의 1이 실업 상태가 됐다. 물가가 폭등하고, 빈곤층은 기아에 허덕였다. 그러면서도 공화당 대통령 후버는 긴축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이런 시기에 당선됐다. 남부 노예주들의 정당으로 탄생했고, 대도시의 부패한 정치 기구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던 민주당이 대공황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했다. 후버와 공화당에 대한 광범한 불만은 '시판론'으로 이어졌고, 많은 미국인들이 루스벨트를 노동계급의 친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루스벨트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자산가들은 내가 이윤 체제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며 불평했다. 루스벨트는 대공황이 사회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뿌리 뽑힌

그러나 루스벨트 임기 첫해부터 대규모 파업이 분출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을 거의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계급투쟁에 직면한 루스벨트와 사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고 사적 이윤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이것이 '뉴딜'의 시작이다.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보험으로 연방정부 복지의 기초를 닦고, 현장조직 건설을 합법화하는 듯한 몇몇 구절이 노동법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거대한 노동계급 투쟁의 성과였다.

1937년, 상황이 변했다. 공황의 폐해는 더 심해졌고, 사장들은 '뉴딜'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재선이 불확실해진 루스벨트는 노동조합의 보수적 중앙 지도부들이 민주당 정부까지 추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그 과정에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과 비판받을 일이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올게도, 민주노총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 상층 관리들의 문재인·안철수 캠프 합류를 비판하며, "노동운동의 진보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내용의 공산당도 뉴딜 정권의 '왼쪽 방'에서 "합법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공산당은 노동조합 중

김민수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김미연 당중초등학교 특수교사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던 그는 방바닥에 누운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천막농성, 노숙농성, 삭발투쟁, 점거투쟁, 단식농성 등 투쟁 끝에 2007년 활동보조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 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장애 당사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복지의 원칙이 아닌 시장의 원칙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본인부담금 인상, 서비스 대상 제한을 고스란히 담은 이 법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외줄타기’ 생존

2009년 최대 월 4만 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은 법 개악 이후 2011년에 사실상 3배로 인상됐다. 노동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월 12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 때문에 수급권자 중 26퍼센트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존 역시 외줄타기 형국이다. 지난 9월, 근육병을 앓고 있던 고 허정석 씨는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달에 1백 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었고,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 활동보조인의 퇴근과 어머니의 귀가 사이에는 한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한 시간 때문에 그는 생을 달린 것이다.

대구의 한 뇌병변 여성 장애인은 출산 후 “똥거”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 1백80시간이 1백 시간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영아원으로 보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화장실에도 갈



사건 출처: 참여당

10월 30일 고(故) 김주영 장애해방운동가 노제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부와 체제가 그를 죽인 것이다.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는 게 다반사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들을 없애는 삶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4대강 사업에 20조 원을 퍼부은 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GDP 대비 0.6퍼센트다. OECD 평균인 2.1퍼센트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복지 같은 데 재원 쓰면 남는 게 없다”, “복지는 즐기는 것”

이라는 전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의 말은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좀더 나은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부양의무제 폐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장애등급제 폐지 입장은 내놓았으나, 부양의무제 폐지는 말하지 않는다. 안철수는 명확한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다.

먹고, 입고, 화장실 가고,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현재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삶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거나 “행기 없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설에 내던져진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하려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제한 없는 활동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부담

금을 폐지하고 활동보조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삶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보건복지부 직접 고용, 생활임금 보장, 노동자성 인정,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도 함께해야 한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요구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 확대를 위한 싸움에 함께하자.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혈떡이는 그를 안고 있을 때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나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다행이라

고, 한편으론 그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시간들을 홀로 견뎌 왔는지 생각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비용 문제를 앞세워 까다롭게 장애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복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때문에 거동이 어려워 혼자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들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

당시 나는 일주일에 6일 이상, 오전 8시부터 밤 늦게까지 간혹 새벽까지 활

동보조일을 했지만 국가는 이 시간 중 일부만을 활동보조 노동으로 인정했다.

속수무책

내가 활동보조한 장애인도 불편하나마 머리와 왼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루 중 몇 시간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없는 시간은 홀로 버텨 내야만 했다. 화재나 다른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김주영 씨의 활동보조인도 전날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는데 그 사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불길 속에서 숨겨진 김주영 씨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했지만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그 활동보조인의 심정이 어땠을지도 마음속에 떠오른다.

10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숨지기 얼마 전까지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던 그의 삶을 기리는 노제가 열렸다.

김주영 씨의 명복을 빌며, 빈곤과 낙인의 사슬을 끊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김태윤

폭풍 샌디가 발가벗긴 자본주의의 모순

폭풍 샌디는 대서양에서 발달한 저기압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샌디는 미국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자메이카, 쿠바, 바하마 제도, 아이티, 도미니크 공화국을 휩쓸었다.

10월 30일 현재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16명은 미국인이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아이티에서는 5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샌디의 규모는 분명 놀랍다. 그러나 주로 서구 나라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때문에 태평양보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태풍이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는다.

올해 6월 방글라데시에서 큰 홍수가 나 1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지만 언론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보다 샌디 충격을 덜 받는다고 해도 미국인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을 때 거의 2천 명이 죽었다. 사망자 수가 이처럼 많았던 것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기반시설이 민영화돼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빈민이나 흑인 주민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는 2008년 미국 대선 준비기간이었고 조지 W 부시가 냉혈한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샌디가 미국에 접근 중일 때 버락 오바마는 기후변화라는 “무척 중요한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논의되지 않은 게 “똥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국에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실 예상액은 2백억 달러[22조 원]에 달한다. 일부 자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이를 부인한다.

‘뮌헨 재보험’은 보험회사들에 보험을 파는 재보험 회사다. 샌디가 오기 바로 몇 주 전에 이 회사는 “기상 관련 손실 건수”가 지난 30여 년 동안 5배나 증가했

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변화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발생에 특히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태풍 강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듯 어떤 기상이변도 온전히 기후변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보험업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후원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정치인 들은 오직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커다란 이윤 손실이나 정치적 위협에 직면한 뒤에야

행동에 나설 것이다.

부국과 빈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망률 차이에서 드러나듯 사람을 보호할 기술과 여건은 분명히 있다. 다만 자본주의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다. 지배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고삐 풀린 자본주의 체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 강제해야만 지배자들은 이중 하나라도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7호 / 번역 천형석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야만을 뚫고 온 불굴의 용기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8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이간질하려는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돌아본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해 온 역사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 상태였다.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하자, 이주노동자들이 관광비자 등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당연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급기야 1994년 1월 10일, 손과 발이 잘리는 등 끔찍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치료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11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의 농성을 통해 알려진 처참한 실태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파장을 낳았다. 결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현 중소기업중앙회)한테 이주노동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그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법률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결국 시행 7개월 만에, 문제가 터져 나왔다.

산업연수생

1995년 1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공장을 도망쳐 명동성당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들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폭언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다가 수갑이 채워진 채 두들겨 맞았다. 이들이 “한국에서 지낸 6개월은 짐승과



사업장 이동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1천여 명이 결집한 9월 23일 서울역 집회

같은 삶이었다”고 절규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처참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열흘 정도 벌어진 농성 투쟁은 커다란 승리로 끝났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 — 최저임금 적용, 강제노동과 폭행 금지, 체불임금 청산 등 — 은 사실상 이들을 노동자로서 대우한다는 양보였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투쟁을 계기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주노동자들의 파업과 집단적 항의는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담양에 있는 세원전기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1999년 10월과 2001년 2월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시화공단의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파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들은 2002년 3월에 보름 넘게 파업을 벌여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한 노동자가 형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휴가를 신청했다가 해고되자, 동료 노동자들이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산역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자신들의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해고 철회, 휴가 보장, 사업장 이동이라는 모든 요구를 쟁취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주노동자 파업은 2002년 1월 포천 아모르 가구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우즈베키스탄·필리핀·몽골 등 9개국 출신 미등록 노동자 93명이 파업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모조리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대표자들을 선출했고 외부에 도움을 호소했다. 노동자들의 투지가 대단했고 한국인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결국 파업은 승리로 끝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변변한 제도가 없는데도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했다.

2004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 최종 폐지됐다.

이주노동자들의 각성

여러 투쟁을 경험하며 이주노동자 운동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조 결성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2년 대구의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결성 단계부터 이주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해 나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2003년 11월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이 극명하게 보여 줬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선포했고, 실제 이 단속의 광풍은 매우 거셌다.

정부 정책에 항의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1천여 명이 농성에 들어갔으나, 대

부분 정부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농성을 포기했다. 그러나 명동성당에 모인 노동자들만은 끝까지 버텼다. 무려 3백80일 동안 항의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매우 광범한 사회적 연대가 건설됐고, 노동운동의 지지도 커졌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 운동의 투사와 리더를 만들어 냈고 이주노조라는 자신들의 조직을 만드는 성과를 남겼다. 2005년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부터 줄줄이 추방됐지만 이주노동자 운동은 굴하지 않았다. 모진 탄압 때문에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를 광범하게 조직할 수는 없었지만, 투쟁적인 이주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이 한국 노조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 금속노조는 2005년 이주노동자를 노조에 받아들일도록 했고, 2007년 8월 삼우정밀 지회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을 받아들였다. 2004년 경기중서부 건설노조도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노조는 꾸준히 성장했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등록 노동자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고용허가제 노동자인 마셀 동지가 위원장을 지내며, 이들도 정부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이주노동자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은 새로운 이주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주노조 비대위 위원장인 우다야 동지의 말처럼, “참을 만해 참아 온 것이 아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을 계기로 쌓여 온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지금 막 각성하고 항의 운동에 뛰어들이 시작한 이주노동자들 중에 이주노동자 운동의 차세대 리더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좋은 자극이 돼 왔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억압과 차별은 자본주의의 야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기도 하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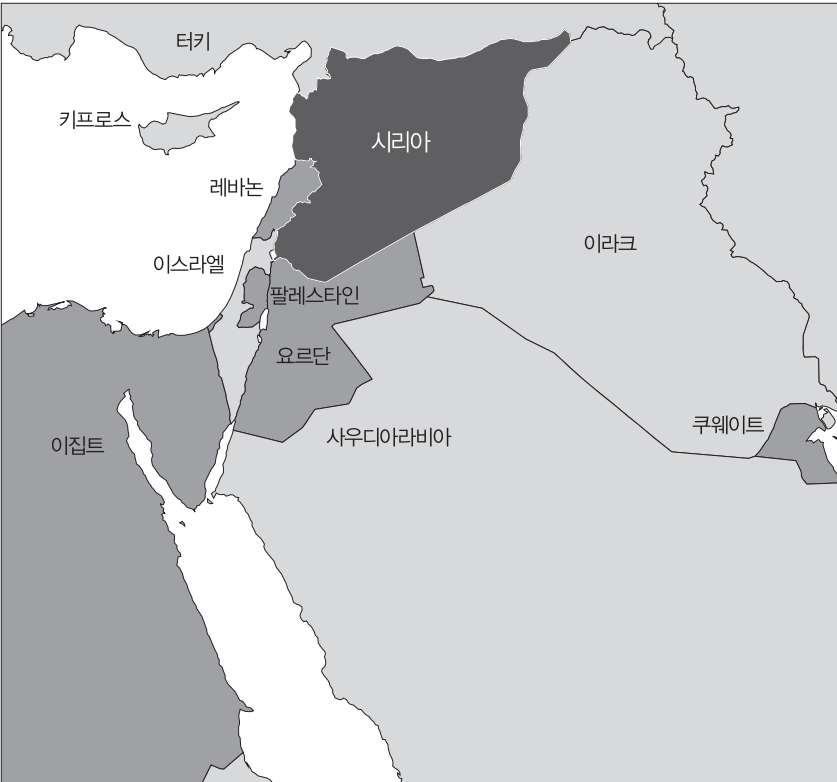
시리아 무장 항쟁과 멈추지 않고 번져가는 아랍 혁명의 불길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랍 혁명을 이어받은 시리아 민중이 지난해 3월부터 19개월 넘게 싸우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폭격기와 포탄을 동원해서 저항 세력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무려 4만 명 이상을 학살했지만 혁명의 불길은 커지고 있다. 저항 세력은 개인화기 위주의 열악한 무기뿐이지만 대중적 지지에 힘입어 전진하고 있다. 시리아 최대 도시 알레포 역시 점차 탈환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 등은 민간인 학살을 막겠다며 시리아 혁명에 개입하려 든다. 그러나 그들은 시리아를 ‘악의 축’이라 부르며 경제제재를 가했고, 이스라엘을 앞세우거나 직접 전투기로 폭격하며 시리아 민중을 괴롭혀 온 장본인들이다.

제국주의 세력이 시리아 혁명에 개입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아랍 혁명의 불길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진화하려는 것이다. 시리아 민중의 영웅적 항쟁은 주변 나라에 용기를 심어 줘 벌써 바레인, 요



시리아인들의 단호한 항쟁은 아랍 혁명의 기운을 주변 나라들로 확산시키고 있다.

르단, 쿠웨이트 등 친미 왕국들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랍 혁명으로 이집트라는 오른팔을 잃은 미국이 우려했던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혁명 초기에 알 아사드를 개혁가라고 치켜세웠다가 2주 만에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갈팡질팡 했다. 이제 서방은 시리아에 친미 정부를 세워 리비아에서 그랬듯이 혁명을 도둑질하려고 든다.

서방 제국주의는 무기 지원을 내세워 저항 세력을 길들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구정권 각료들과 친서방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시리아국가위원회’는 기층 활동가들과 저항군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 혁명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진정한 동력이 아래로부터 투쟁을 지지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컨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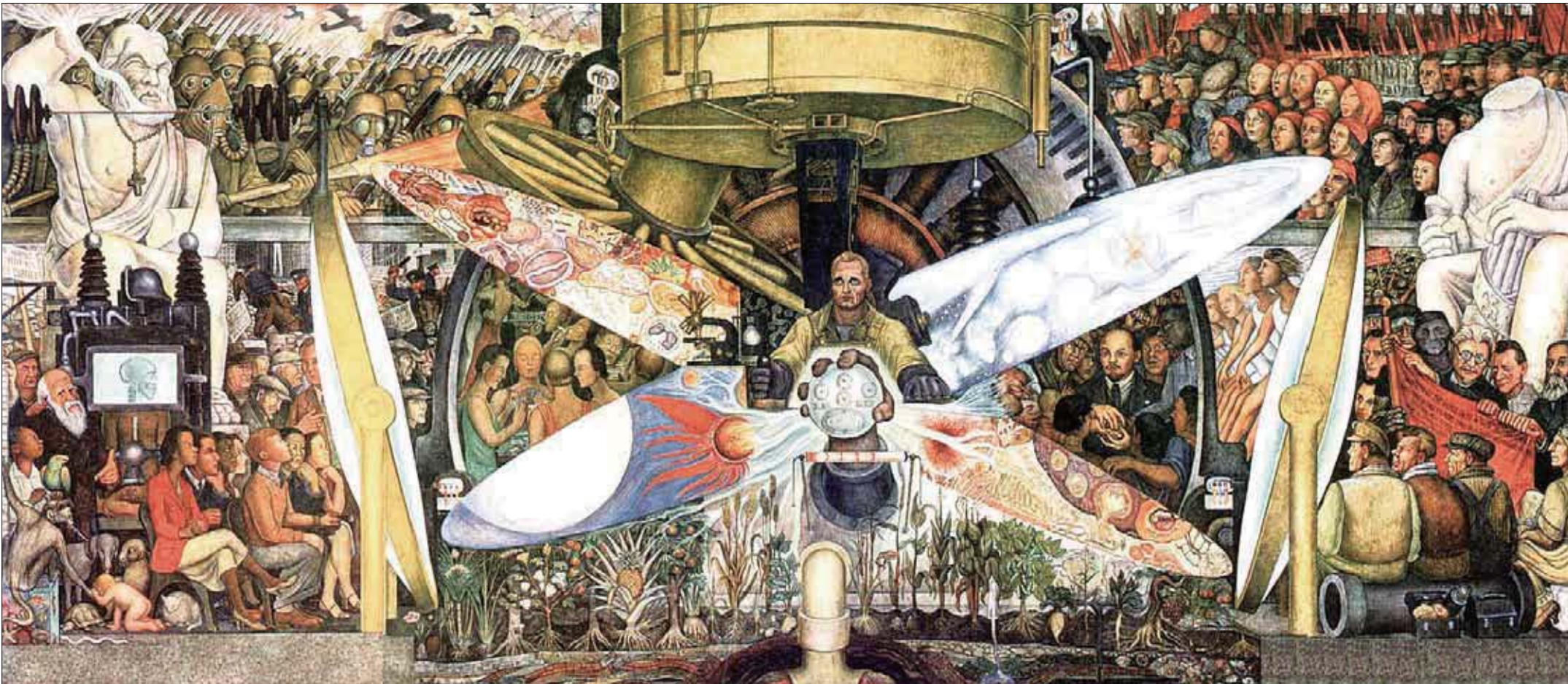
침략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여 승리했고, 종파를 초월한 반제국주의 정서에 힘입어 역사상 최초로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반제국주의를 명분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빠르게 잃고 있다. 야당으로 전락했던 친서방 세력은 이제 정권탈환의 기회를 잡으려 한다. 최근 레바논 수도에서 벌어진 배후가 불분명한 폭탄테러가 기폭제가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저항 세력 하마스는 이미 지난 2월에 공개적으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혁명 세력을 지지했다. 실제로 아사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는 등 결코 일관된 반제국주의자가 아니었다.

독재와 제국주의, 그리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서방과 독재 정부 모두에서 독립적인 아래로부터 투쟁이 중요하다.

김종환



멕시코 벽화 운동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1934년 작품 '십자로의 남자' 전 세계적 자본주의 위기는 우리에게 근본적 변혁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원한다. 일자리, 빈곤 탈출, 질 좋은 교육, 건강보험, 주택을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지금, 이 체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존 몰리뉴가 이 물음에 답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 이론자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오늘날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인가?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발목 잡힌 지도 어느새 4년이 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이번 경제 위기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괄목할 성장세를 보인 중국조차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혁명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불안정성은 자본주의의 근본 속성 중 하나다. 자본주의 체제는 호황과 불황, 즉 경제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번 경제 위기의 근원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후 호황이 끝날 즈음 기업의 이윤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 동안 자본가들은 거대한 신용 거품으로 이런 수익성 하락을 감춰 왔다. 직접 투자보다 금융 체계를 활용한 기금 대출이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런 신용 거품이 언제까지나 계속 확장할 순 없었다. 2008년에 금융 거품이 꺼지자, 전 세계 금융 체계는 마비됐다. 그 뒤로 거듭거듭 구제 금융이 투입됐지만 이미 망가진 금융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부적합한 인물이 경제를 운영하는 게 문제 아닌가?

물론 오늘날 경제를 주무르는 인사들이 부적합한 인물들인 것은 맞다. 탐욕스럽고 노동자를 경멸하는 이 정치인·관료들은 빈부 격차를 늘리는 데 여념이 없다.

정말 꼴 보기 싫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는 보수당 집권 전인 2010년에 시작됐고, 그 출발이 미국 월스트리트였다.

당시 미국은 그 끔찍한 조지 부시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조지 부시를 버락 오바마로 교체해도 위기가 해결되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가 좌파의 희망으로 떠오르며 수백만 표를 획

득해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긴축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사악하기 짝이 없는 우파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은 훌륭한 성과겠지만, 그 자체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전 세계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철회하면 어떻게?

많은 좌파가 사민주의 정당을 비롯한 전 세계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일련의 전향과 정책들을 수용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시장, 즉 이윤과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복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 체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둘 때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나서 사람들을 도우면 문제만 악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자들의 소유를 늘려서 자본주의의 수익성 위기를 돌파하려고 고안된 지배계급의 프로젝트였다.

신자유주의의 반대 진영은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긴축 정책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력을 떨어뜨려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종종 케인스주의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이 정책으로는 결코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위기에서 벗어날 순 있을까?

정부 지출을 늘려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케인스주의다. 케인스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공공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귀족학교 이튼스쿨 출신의 케인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동계급에게 적대적인 속물이었지만, 오늘날 케인스주의 옹호자들은 대체로 좌파에 속한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투자를 바라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학교, 병원,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요구하는데, 우리도 이런 계획을 지지한다. 다만 우리는 이런 투자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일자리를 갖길 바란다. 또 평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건물을 짓는 것도 찬성한다.

그러나 경제적 수요를 진작시켜 위기를 해결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법으로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수요가 아니라 생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체제의 회복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법만을 안다. 우리가 이 썩은 체제를 타도하는 데 케인스는 도움이 못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경제 체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자본주의는 분명 이전 봉건제보다 강력한 체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다. 청년 실업자들은 '잉여' 취급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이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상위 1퍼센트가 소유한 부는 하위 57퍼센트의 부를 모두 합친 것만큼 많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이 소유한 부가 가장 가난한 47개 나라가 생산하는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자본주의가 가하는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 위기는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인종주의와 파시즘, 나아가 전쟁의 가능성도 커진다.

기후변화는 또 어떤가? 이 또한 자본주의가 단기적 이익을 쫓아 지구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약탈한 결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본주의 타도가 허황된 목표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은 겨우 몇 세기 전일 뿐이다. 또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이 자본주의를 타도할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다.

노동자의 노동은 사장의 이윤을 포함해 자본주의에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근무지가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상점이든 사장이 아니라면 노동계급의 일부로 봐

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노동자의 노동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은 이와 사뭇 다르다. 노동자들은 흔히 탄압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이다.

그러나 투쟁에 나서면서 우리는 주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어렵듯이 느끼게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마다 우리가 그 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해 일터를 마비시키는 파업은 결국 우리가 없다면 사장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보여 주는 단초가 된다.

사회주의가 가능할까?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혁명은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못했고, 특권을 가진 관료 엘리트가 출현해 혁명의 성과를 가로채 갔다.

러시아 사회는 노동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사회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이 이윤을 쫓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대중 혁명이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을 목격할 바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의 투쟁은 혁명이 결코 백일몽이 아니란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식량, 주택 등 전 세계 인구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를 부자들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조명훈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①

동성애는 ‘비정상’인가?

〈레포트21〉은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 연대하며 성소수자 해방의 쟁점을 연재한다. 세 차례 연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고, 억압의 뿌리를 파헤치고, 성소수자 해방의 전망을 다룬다.

박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그래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연설을 하고 각종 매체에 동성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동성애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것 같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동성결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동시에 혐오범죄도 늘고 있다. 2005년 이란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공개처형했고 올해 초 칠레에서는 20대 게이가 신나치주의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동성애 처벌법을 강화하려 한다.

이슬람 문화와 아프리카 전통 등 특정한 문화와 관습 또는 개인적 차이가 동성애 혐오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성애 혐오는 자본주의 사회 일반에 존속하고 있는 폭력적인 현상이다.

불과 3년 전에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한 동성애자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 뉴욕의 유명한 동성애자 거리에서도 폭행 등의 혐오범죄가 빈번히 일어난다. 괴롭힘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케이블방송의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트랜스젠더 토크쇼가 “트랜스젠더를 부추킨다”는 반대에 부딪혀 폐지됐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나 〈빌리티스의 딸들〉과 같이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들은 똑같은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는 코미디에 가까운 구호가 대표적

이다.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의회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하면 에이즈가 창궐해서 아이도 못 낳는다”거나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는 반대파 의원들의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 유지의 대척점에 동성애자들이 서 있길 바란다. 국가는 ‘아이도 낳지 않고 가족도 만들지 않는 동성애자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는 없다’고 말한다. 모든 사회보장이 ‘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 있는 탓에, 결혼을 이성애자만의 것으로 못박은 미국 혼인보호법은 동성 커플을 연방 차원의 1천1백여 가지 혜택에서 제외시켰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우파와 재계는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지향’의 7개 영역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라고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가 후퇴해 결국 차별금지법은 좌절됐다.

우익들은 동성애를 다른 매체를 접하면 동성애가 전염되고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동성애자의 유전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이성애의 원인’은 묻지 않을까? 성의 기원과 시민적·정치적·인간적 권리는 무관하며 평등은 과학적 명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흑인이나 여성이 열등한 존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과학적 근거들도 모두 허구였다.

지독한 편견

‘동성애=에이즈’라는 낡은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우익들은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이 무려 7백30배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는다. 한국 감염



2012년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동성애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인 중 상당수가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섹스를 통한 에이즈 감염에서 핵심은 콘돔 등을 사용한 안전한 섹스 여부이며, 에이즈는 수혈이나 주사기 공유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에이즈는 돈과 지원만 충분하다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 감염인의 압도 다수가 동성애자의 권리가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대륙에서는 감염인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는 것은 에이즈가 ‘빈곤의 질병’이라는 진실을 보여 준다.

에이즈는 ‘질병’ 중 하나일 뿐인데도, 에이즈 감염인들을 공포스럽고 부도덕하게 여기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당하도록 놔두는 것이 진짜 문제다.

남한 정부는 동성애 혐오를 안보 논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마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파는 게이가 군대에 가면 국가 안보가 무너질 것이라

고 주장하며, 게이를 옹호하는 자들은 모두 ‘친북 빨갱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른바 ‘남성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게이에 대한 천대를 강화한다. 그러나 위계질서와 폭력, 서로 총을 겨누는 일, 국가를 지키는 일 등이 ‘남성다움’으로 포장된다면, 그건 이성애자 남성에게조차 이롭지 않은 일이다.

동성애 억압은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제도다. 가족제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가족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결혼 밖의 애정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부류가 됐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따위의 성역할 또한 가족제도와 더불어 강화되는데, 이는 수많은 종류의 부당한 성차별과 편견을 강화한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낸다. 첫째, 공포심 조장을 통해 ‘가족 가치’를 강화하고 사회를 보수화한다. 둘째, 경제 위기 상황이나 정권이 정당성을 잃어갈 때 사람들의 불만을 동성애자나 가족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이 어떤 기반에서 자라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동성애 혐오를 표현하는 옆집 사람이나 같은 회사 동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가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낡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한 물결 속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신간 서평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인류가 야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세계경제 위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우파 경제 전문가들조차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탄식을 공공연히 내뿜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르크스를 재조명하는 책이 잇따라 출간돼 인기에 띄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강연과 토론회도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뛰어난 점은 자본주의 경제 분석만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한 것은 자본주의를 뛰어넘기 위해서였다. 세상이 잘못됐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르크스 경제학뿐 아니라 정치학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입문서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측면을 통일적으로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는 옛 소련·북한 등과 동일시되면서

억압과 독재의 사상으로 오해되고 있거나, 기껏해야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공상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그래서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 중 다수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에 머물거나, 모든 집중주의적 형태의 조직에 부정적인 자율주의에 경도되기도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가 쓴 이 책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지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옛 소련·북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혁명은 왜 여전히 가능하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 주장들을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옛 소련 사회가 실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토니 클리프의 설명은 자본주의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오해를 바로잡는 것과 연결돼 있다. 사적 소유의 존재가 자본주의를 규정하지는 않으며, 자본주의

와 스탈린식 관료적 지령 경제 역시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리프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도 스탈린주의 러시아와 사회주의 사이의 불연속성, 그들과 자본주의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내 보여 준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지만,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노동자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어 권력을 잡았고, 쿠바에서는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들이 아예 권력을 먼저 잡고 나서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두 나라는 소련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 사례들도 마르크스주의를 폐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혁명은 20세기 초반만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그들을 분노케 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혁명들 다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을 혁명 조직이 계급

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주의자들이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혁명을 밀어붙이지 않고 중간에 타협했기 때문이다.

현대를 관통하는 혁명의 역사들로부터 혁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답을 일반화할 수 있다. 혁명적 잠재력을 가진 노동계급이 존재해야 한다(이 조건은 남한을 비롯해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충족돼 있다). 그리고 그 노동계급이 혁명을 주도하되, 절반의 과제 성취에 멈추지 말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노동계급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명은 한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세계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토니 클리프는 인류가 “사회주의나, 야만주의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을 인용한다. 인류가 야만의 역사를 쓰지 않기 바라는 투사들은 이 책을 봐야 한다.

강병준



토니 클리프 지음, 천경록 옮김
책갈피, 168쪽, 8천 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14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 활동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투쟁 지지 활동

지난 10월 29~30일 ‘노동자연대다 함께’ 회원들과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레프트21> 거리 판매와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홍보전을 진행했다. 서울의 혜화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과 인천 주안역, 수원역, 울산 등에서 진행한 홍보전은 대성공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모금을 호소하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돈을 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모금으로 전국에서 약 40만 원을 모았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천만 인 서명’에도 2백여명이 서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불안정한 일자리와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수많은 미조직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은 곳곳에서 연대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대입구역에서 진행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홍보전

한 회원은 전교조 지역 수련회에 참가해 후원을 호소해 그 자리에서 14만 원을 모금 받았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대 메시지와 모금을 받은 회원도 있다.

여러 단체들에도 지지 성명과 모금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노조, 건설노조, ‘반

올림’, 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KT 전국 민주동지회 등 몇몇 단체들이 지지 성명이나 투쟁 기금을 보내기로 했다. 또 서울 서부 지역의 진보적 단체들은 홍대입구역에서 공동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태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다

나는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 지지를 조직하려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함께 만들기’ 서명 용지와 비정규직지회 투쟁 기금 모금함을 들고 작업장을 돌았다.

현대차 4공장 차체라인 각 공정을 순회하면서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서명과 철탑 농성 지지 모금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8명이 서명했고, 3만 7천 원을 모금했다. 조합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돈을 놓고와 큰 액수가 모금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지지가 컸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진짜 비정규직은 없어야 돼”, “이제는 출근할 때도 추운데 철탑 위는 얼마나 춥겠어.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난 반장인데 괜찮겠냐?” 하면서 서명과 모금에 참여했고,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요구인데 정규직이 나서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하고 모금에도 참여했다.

“지금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돈은 없는데 내일은 반드시 모금에도 참가하겠다”고 하거나 퇴근복을 갈아 입는

휴게실에서 모금에 참여한 정규직 조합원도 있었다.

사실 처음에 ‘서명과 모금이 잘 될까?’하면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부딪쳐 보자고 마음을 먹고 시도해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지부는 이런 분위기를 확대하고 강화해 더 적극적인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동석 울산 현대차 4공장 정규직 활동가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도 뜨겁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학생들의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에서 대자보 부착·리플릿 반포·투쟁 기금 모금·지지 메시지 작성,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천만인 선언’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

지금까지 20여 차례 투쟁 지지 홍보전을 진행해 총 50여만 원이 모였다. 강의실에서 뿌린 리플릿을 보고 집회 참가를 결정하거나, 자기 후배들에게 나눠

주고 싶다며 리플릿을 더 받아가고, 음료수와 초콜릿 등을 주며 응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회원들이 발의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결의문이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대 활동은 큰 성공을 거뒀다. 인천대에서는 청소년노동자들과 함께 한 서명에 이를 만에 1천4백 명이 동참했다. 연세대 공공운수노조 청소년·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지지 배너와 모금한 돈 19만 원을 울산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26일 울산 현대차 포위의 날 집회에

서 학생들의 지지 메시지와 모금을 받은 현대차 노동자들은 매우 기뻐했다. 송전탑 위의 천이봉 사무장도 전화 연결로 “학생들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런 지지 활동들이 더 넓게 확산되고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회원과 지지 학생들은앞으로도 캠퍼스에서 현대차비정규직투쟁연대활동을이어나갈 것이다.

또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등 여러 학생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과 홍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익진

기간제 교사의 삶과 투쟁

“애벌레를 벗어나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집단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간제 교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규직 교사의 일을 대신하는 교사다. 정규직 교사가 출산, 유학,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교사의 업무를 전부 인수받아 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이 때문에 온갖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정규직 교사가 1년을 휴직해 1년 계약을 체결해도 휴직 사유가 1년 안에 소멸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도 끝이 난다.

그래서 한 기간제 교사는 1년 계약을 했지만 외국에 나가 있던 정규직 교사가 두 달 먼저 귀국하자 바로 해직이 됐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그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의 졸업식을 보지 못한 채 12월 말에 그 학교를 나와야 했다.

몇 년 전 내가 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1월이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지급됐으니 급여를 환불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네이스 투쟁을 할 때였다. 친하게 지내던 전교조 교사가 내게 네이스에 관한 교내 토론회에서 지지 발언을 해줄 것을 부탁해 와, 발언을 했다. 그런데 구두로 2년 계약을 약속받았던 학교였으나 토론회 이후로 남은 계약 기간 1년은 다른 기간제 교사로 대체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3월 2일자로 계약을 하는 아비한 수법을 쓰기도 한다.

‘희망 고문’

‘쪼개기 계약’으로 차별받기도 한다. 학기별로 계약하고 방학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1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 정규직 교사로 발령을 내 주겠다고면서 부러먹는다. 그러나 이 말을 지키는 학교는 드물다. 그래서 이를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

‘희망 고문’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립학교는 7년을 근무한 한 기간제 교사에게 재단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내면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고 했단다.

나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여서 입원을 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아팠지만 학교의 눈치가 보여 병가를 쓸 수 없었다. 물론 계약서에는 기간제 교사도 7일간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다음해 계약을 위해서는 아플 수도 없다.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해임된 기간제 교사도 있다.

이런 처지임에도 주어진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뤄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은 희망을 느끼게 해 줬다. 전교조가 지원하고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가 앞장서서 이뤄진 일이다.

집단소송

지난해 5월 전교조는 기획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승소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전현직 기간제 교사 6명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전기협을 만들었다. 전기협은 지난 10월 31일에 원고 2천7백 12명의 서류를 접수하고, 성과급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올해 4월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의 기간제 교사 수는 4만 79명이다. 교사들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4.7퍼센트, 중학교 11.5퍼센트, 고등학교 11.1퍼센트에 이른다.

내년에 교사 임용 수가 줄면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 수 있다. 현재도 미발령, 집중이수제, 교과 선택제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집단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기간제 교사들의 운동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받는 설움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학교 식당 급식 조리사,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그들에게 영감을 얻고 그들처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의 삶은 버려야 한다.

박혜성 기간제 교사

서울시립대

고용안정을 위한 싸움에 나선 청소·시설 노동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인원을 증원하라! 마음 편히 쉬고 싶다. 휴게 공간 보장하라!”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간 노동자들은 결집하면 해고 협박을 하는 관리자와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해야만 하는 휴게실 등의 문제들을 묵묵히 참아 왔다. 시설 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에도 시달려 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의 이사장 격

인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시는 시급히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불만들은 차곡차곡 쌓여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두려움을 넘어 단결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2일 꿈에도 그리던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매우 정당한 외침을 학교 당국과 용역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있다.

용역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용역회사에 가서 할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느냐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사무처장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야말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수년간 학교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을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은 예전처럼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

다. 이제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10월 31일에 진행된 홍보전에서는 총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서울시립대 모임 등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많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발언을 듣고 리플릿을 읽었다.

이런 행동을 확대하고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 학생들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여러 차례 승리한 역사가 있다. 노동자와 학생이 힘을 합쳐 싸우면 서울시립대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연대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어 가자!

정현호 서울시립대 학생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상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10·25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비록 총회가 공식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려는 항의 점거 농성을 벌였다.

총장과 학교 본부에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가짜 5천 원은 1백90장이나 모였고 비상총회 준비 기금 모금도 현장에서 6만 원 넘게 걷혔다. 수업을 빠지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날 비상총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매우 높았다.

총회에서는 현장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학교 당국에 쌓인 불만을 표출했다.

“도대체 수강 신청을 못 한다. 2분 지나면 다 차 있다. 수업 못 들으면 졸업을 못 하는데 도대체 졸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사회학과 04학번)

“총동문회 집회에서는 총장님이 직접 왔는데, 지금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는 왜 안 나오는 거냐. 총장님, 이사장님, 이견 아니잖아요!”(회학과 01학번)

“셔틀버스 일부 없애고 유료화하겠다고 한다. 아침에 3대밖에 안 된다. 1교시 지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총장님은 셔틀버스 한 번 타면 갑출 소리 안 나올 거다.”(중어중문학과 새내기)

“학교가 적립금을 1천1백억 원 넘게 쌓아만 두고 있다. 나는 등록금에 실험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돈 좀 학교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학교에 공부할 공간이 없다.”(물리학과 11학번)

“총학생회가 이번 총회 소집을 안 한

것도 문제다. 진정한 총학생회라면 거창한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정외과 02학번)

비상총회가 끝난 후 학생 20여 명이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를 총장한테 직접 전달하려고 본부관을 향했다. 학교 당국은 경비와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의 본관 출입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학생들은 1층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본관 로비 안팎에 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대자보를 손으로 써서 붙였다. 저녁이 되자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지지 물품과 간식을 사 들고 오기도 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기말고사 2주 전까지 12대 요구안에 대한 학교 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학생처장이 공개해 내놓는다’는 요구안을 학생처장이 직접 수용하면서 해산했다.

학생처장이 이런 요구나마 받아들인 건 학생들이 비상총회, 점거를 통해 학교 본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본부의 답변을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또다시 집회를 할 것이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요구안에 답변이 없거나 무성의한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에 맞선 행동을 벌일 것이다.

한편, 광범한 분노가 있는데도 학생들이 더 많이 결집하지 못한 것은 총학생회가 비상총회 소집을 비민주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학생회장은 뻔뻔하게 비상총회에 와서 발언을 신청했다. 우리는 변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아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인천대

인천대를 빗더미 대학으로 만드는 법인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국립법인 인천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가 추진한 공청회가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로 무산됐다.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인천대 지원액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고, 향후 5년간 인천대가 2백억 원을 대출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라고 한다(부채 상환의 책임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시다). 정부는 매년 대출 이자 9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는 오직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등록금을 인상하고 교직원들을 구조조정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상태라면 내년에 등록금이 50만 원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캠퍼스는 비좁은데 약속한 건물 신축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교수협 의회의 말대로 이대로라면 빈털터리 빗더미 대학이 되는 것이다.

학생과 직원 측의 연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한 설준위의 태도는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었다.

지금 인천대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대로 법인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채 법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은 공청회를 저지하는 움직임에 최대한 연대했다.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성과다.

다만 원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청회를 저지한 후에 발전본부실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총학생회가 이를 취소한 것은 아쉽다.

나는 학생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학교 당국에 학생들의 의견을 확실히 피력해야 설준위가 이런 공청회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총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은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면 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법인화 ‘유보’ 찬반투표를 잡고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더 나아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광범한 지지를 강력한 행동으로 분출해야 한다.

법인화는 결국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투쟁을 발전시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될 법인화는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짜’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

박한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

독자토론광장

11월 14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내가 항소하는 이유

“한미FTA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10월 19일 법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10월 25일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그 이유는 한미FTA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사라지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서조차 한국이 “노동시간 세계 1위”인 것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가 나쁜 아니라 다른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최후진술조차 잘 보장해 주지 않고 변호사의 집시법 ‘위헌 논란’ 주장에 대해 “집시법 위헌 논란? 들어본 적 없다” 하고 말하면서 헌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 집회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등 철저히 정부와 1퍼센트의 편을 드는 것에 항의하기 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등 다양한 투쟁에 함께한 김재원 씨

해서다.

이명박 등 보수집권 세력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원열 교수를 구속시키고, 나 같은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진보 운동을 위축시키

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공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재집권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우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김재원

삼성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으며

진실은 통한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경험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회사 동료 80여 명에게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은 경험을 보내 왔다. 이 노동자는 그 자신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이기도 하다.

얼마 전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법원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이미 반올림을 통해 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음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 여름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를 직접 만나 내가 삼성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나눈 적도 있다.

나는 20대 초반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검사실 공정 중 유기용제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이로 인해 얼굴 전체가

심한 화농성 여드름으로 덮여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반도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남 일 같지가 않았다.

탄원서에 서명해 준 한 회사 동료는 그 자신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 분은 “클린룸”의 추악한 이면과 삼성이 얼마나 악독하게 반도체 노동자들을 착취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도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줬다.

또 다른 동료도 “정말 가슴 아프고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일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며 자기가 속한 팀 동료들에게도 탄원서를 주면서 함께 해 줬다.

많은 동료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또, 얼마 전 구미에서 불산 유출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어서,

불산이 반도체칩을 세척할 때 사용된다는 얘기는 탄원서를 받는 데 도움이 됐다. 내 얼굴에 생긴 흉터와 화농성 여드름 또한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라는 점을 얘기하자 더 많은 동료들이 지지해 줬다.

처음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내밀 때 ‘어떻게 얘기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하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용기 내서 내민 그 손을 동료들이 적극 잡아 쥐 마음 한편에 있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됐다.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함께해 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동료들에게 서명을 호소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은 엄청 멋진 연설을 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회에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면 통한다는 걸 믿었기에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주원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토니 클리프, 책갈피)를 읽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죽은 적이 없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월 항쟁에서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 구호가 주를 이뤘지만, ‘민중정부 수립’, ‘제한의회 소집’,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의 구호도 있었다. 그러한 구호들은 새로운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금도 회자되는 NL-PD(ND) 논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한 편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 CA(제한의회)그룹을 필두로 한 ‘맑스-레닌주의’를 받아들인 세력이 있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 기치 아래 말살됐던, 사회주의 사상이 파쇼적 폭압 정치를 자양분으로 자라났다. 여기에 19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일깨워 주며, 새롭게 퍼지기 시작한 사상의 밑거름이 됐다.

한편 1987년은 소련의 붕괴가 시작된 원년이기도 하다. 소련은 1991년 말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중국도 겹질만

남은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한다. 소련과 중국을 현실 사회주의라고 믿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것은 충격적 경험이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념의 혼돈은 사회주의자들의 이합집산을 낳았다. 자본주의 체제에 무릎 꿇어버린 자들도 줄을 이었다(제한의회 그룹 출신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강철서신’ 저자인 김영환 등을 보라).

함정

하지만 이들이 받아들인 맑스-레닌주의에는 애초에 함정이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은 맑스-레닌주의에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가득찬 쓰레기들을 버무려 놓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수입돼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미화됐다. 그것은 아편이었다. 스탈린주의는 “국제 노동운동의 아편 노릇을 했다.”

스탈린주의는 당을 계급 위에 올려 놓

았다. 스탈린주의는 계획을 통한 관료지령 경제를 노동자 민주주의 경제 위에 올려놓았다. 사회주의는 관료 계획경제와 같은 말이 됐고, 일당 독재가 됐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됐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나 관료가 지령하는 계획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성립된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는 1928년 스탈린의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변질됐다. “관료층이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빨리 완수하겠다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내디딘 첫걸음이 국가자본주의 건설의 토대가 되는 역설적 현상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서 1987년 이후 부활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은 1991년 소련 몰락과 함께 동반 침몰하다시피 했고, 혼돈을 거듭했는데,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그러한 혼돈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을 해나가는 데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안철환

유럽 공동총파업이 건설되고 있다

국경을 넘은 단결로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

김종환

11월 14일 유럽 노동자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사상 초유의 유럽 공동총파업을 벌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공동총파업이 이미 결정됐고, 몰타와 키프로스에서도 공동총파업 참가가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일명 '트로이카')이 남유럽 나라들에 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강요한 것이 이번 총파업을 촉발시켰다. 이 나라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외국인행에 이자를 지불하느라 재정이 파탄 났다.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복지 지출과 공무원 임금을 깎아 외국은행에 진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또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긴축 때문에 경제가 쪼그라들어 그리스 청년 실업률이 55퍼센트로 치솟았는데 말이다!

포르투갈에 강요한 긴축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데도 트로이카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최근에도 포르투갈 정부는 트로이카에 돈을 갚기 위해 노동자들의 세금과 복지 부담을 '핵폭탄'급으로 인상했다.

스위스 은행

구제금융으로 내몰린 스페인에서는 5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매주 2천 명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가 자국민을 위한답시고 취한 조처는 먹을 것을 찾아 뒤지지 못하도록 쓰레기통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일이다!

이런 트로이카와 그 풀마니 노릇을 하는 각국 정부에 맞서 그동안 노동자들은 국가별로 싸워 왔다.

그리스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스무 번이 넘는 총파업을 벌이며 앞장서서 이번 유럽 공동총파업의 길을 닦아 왔다.



10월 18일 스페인 긴축 반대 투쟁. 이런 투쟁들이 유럽 공동총파업의 밑거름이 됐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공동총파업에 앞서 의회가 새 긴축안을 표결에 부치는 11월 7일과 8일에도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 국민들에게 긴축을 강요해 온 그리스 정·재계 인사와 부자 2천여 명이 스위스 은행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폭로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9월 1백만 명이 거리시위에 참여해 긴축 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불과 한달 만에 정부는 세금 인상안을 다시 발표했다. 시위를 넘어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받은 포르투갈 노총은 다른 나라에 연대 총파업을 호소했다.

이눔(사회당) 저놈(국민당) 바뀌가며 정권을 맡겨 봤지만 다를 게 없어 풀파구를 찾던 스페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화답했다.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광장 점거 운동과 광원의 장기 파업이 투쟁의 근육을 단련해 왔다.

유럽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같은 날 "긴축에 반대하고 일자리와 유

럽의 단결을 위한"(유럽노총) 연대 행동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5개 노총이 동침을 선언했고,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에서도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

이런 연대 행동은 그동안 자본가들이 남유럽 노동자들을 싸잡아서 '돼지들'(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첫 알파벳 모음)이라고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나라별로 이간질 해온 것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다.

파시즘 반대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유럽에 파시즘이라는 절망의 곰팡이를 퍼뜨리고 있다.

파시스트들은 이주민(오늘날 유럽에서는 특히 무슬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며 희생양 삼으려 한다.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에서는 공개적으로 나치를 표방하는 황금새벽당이 "그리스 일자리는 그리스인들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날뛰고 있다.

그런데 파시즘 발흥의 원인인 긴축 정책을 도입한 그리스 정부는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좌파를 탄압하며 파시스트와 타협했다. 그리스 경찰의 절반이 황금새벽당을 지지하고, 경찰이 반(反)파시즘 활동가를 납치해 고문하는 사건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좌파가 건설하고 있는 반파시즘 투쟁도 긴축 반대 투쟁과 결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의 '인종차별과 파시즘 위협에 맞선 운동'은 파시즘의 원조 무솔리니를 그리스에서 쫓아낸 국경일(10월 28일)에 파시스트와 긴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날 황금새벽당은 감히 거리에 나오지 못했다.

8월에도 파시스트의 인종차별에 반대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또 "파시스트, 은행, 트로이카는 한통속 쓰레기다"라는 구호가 갈수록 많은 파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9월 1일 파시스트 단체 영국 수호동맹이 행진을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회주의자와 노조 활동가가 포함된 반파시즘동맹이 맞불 집회를 개최해 압도적인 규모로 행진을 무산시켰다. 반파시즘동맹은 10월 27일에도 비슷한 패배를 파시스트에게 안겨 줬다.

지난 몇 년간 연거푸 패배를 겪으면서 파시스트 정당인 영국국민당은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방의회 의석을 잃고, 당이 쪼개졌다.

유럽 공동총파업은 파시즘에 가하는 또 다른 일격이 될 것이다.

아랍 혁명과 이집트 노동자 운동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 전진하고 있다”

힌드 압드알 가와드 이집트 민주노조 활동가

혁명 속에서 이집트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직과 힘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보여 준다.

나는 혁명 전인 2010년 초부터 작업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조직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활동가들은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의료보험, 고용 안정을 내걸고 싸웠다.

내가 사는 자가지그에서도 카이로처럼 2011년 1월 25일 시위가 몇 차례 벌어지면서 혁명이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내무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리로 나서자는 호소에 호응했다.

이때는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기 전이었고 사람들은 정권의 몰락을 바라며 요

구안들을 내걸기 시작했다. 작업장 동료들도 이러한 저항에 동참했지만 노조가 공식적으로 조직한 것은 아니었다.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은 30년 동안 지탱된 불의와 학정의 몰락이었다. 혁명을 알리는 구호는 “빵, 평화, 사회 정의”였다.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권이 민중의 의지를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더욱이 혁명의 주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독립 노조 활동가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혁명 이후 들어선] 정권은 노동자들이 떠나없이 독립 노조를 건설한다면 정권의 지배가 흔들릴 것임을 알고 있다.

정권은 노동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

다. 공개 토론과 비준을 요구하며 의회에 제출된 노동조합 자유에 관한 법안을 정권은 거부했다.

정권은 현재 마지못해 독립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무바라크 시절의 억압적인 노동조합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또 정권은 무바라크 시절 국가가 통제하던 노조연맹에서 선거를 조직하려고 한다. 정권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활력을 억누르는 데 있다.

빵·평화·사회 정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인 모하메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은 혁명의 수혜를 입은 대통령이 혁명의 목표들을 이뤄 주리라 예상했다.

사람들은 학살자 처벌과 사회 정의가

실현돼, 노동자들을 빈곤에 빠트린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불안정하다. 물가는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노동자들은 해고됐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있다. 그 때문에 이집트 곳곳에서 여러 부문의 노동자 파업이 늘면서 노동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파업은 최저임금제와 최고임금제(사회고위층이 받는 연봉 제한) 도입, 부패 근절을 요구한다. 대중교통 노동자, 교사, 의사, 공장 노동자 모두 파업 물결에 동참했다.

국제적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연대야말로 절망적인 시기에 우리를 고무한다. 우리의 투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도 국가에게 압력이 된다.

취임 1백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르시에 대한 평가는 현

재 부분하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무르시가 자신과 무슬림형제단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은 10월 12일 무르시에게 책임을 묻는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리를 장악하려 했다. [이날 무르시 찬반 세력의 충돌로 1백여 명이 다쳤다.] 무슬림형제단은 시위대를 고발하고 탄압하며, 권력의 전환에 대한 대중의 눈총을 딛 곳으로 돌리려 한다.

식료품 가격과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다. 현재 이집트는 IMF에 차관을 요청하고 있다. 요리용 연료와 휘발유 공급부족 사태도 여러 번 있었다. 연료가 너무 비싸 이집트인들의 낮은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천형석